

## 재해예방기술 및 교육의 발전방향

유재환<sup>†</sup> · 김상철  
세명대학교 안전공학과

### I. 안전기술 발달의 필요성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이 7조28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손실 일수도 약 46834천에 달해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보다 3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재로 인하여 산업계 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음에 틀림없다.

산업재해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당면하는 일이지만 우리 나라 재해수준은 경제발전 정도나 규모에 걸맞지 않게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64년이래 316만 명에 달해 대구시 인구보다 많을 정도다. 이 기간중 사망자만 보더라도 5만1000명으로 7년동안 베트남 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10배 이상 이라고 하니 우리 나라 산업현장은 가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원인은 아직까지 우리 산업구조가 전통적 제조업과 건설업 등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업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업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무할 정도의 취약성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 동안 무재해 캠페인 등으로 한동안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듯하다가 IMF체제에 접어들면서 다시 안전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게 주된 이유다.

실제로 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액을 늘리지 못하는 안전과 환경분야등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러한 기업경영 풍토가 결국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기업경영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밖으로는 남기고 안으로는 손해를 보는 경영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 예를 들것도 없이 우리 나라에서도 경영이 잘 되는 기업은 하나같이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기업경영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그렇지 않고서는 산재로 인한 기업자체의 경제적 피해와 인명손실을 막을 대안이 없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아무리 가져도 산업현장에서 전생수준에 준 하는 정도로 근로자의 인명이 손상되는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천하가 소용없다.'는 격언처럼 아무리 국가가 고도성장을 하여도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러한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쓸모 없는 정책이 되고 만다.

한때 성장위주의 정책 및 인명경시 풍조로 말미암아 환경 및 산업재해율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고 끝없이 증가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한 것은 한번 기회를 잃으면 종전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하다.

기업규제완화 조치 및 민족의 커다란 재난인 IMF를 맞아 가장 먼저 붕괴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 안전 시스템의 가동체제일 것이다. 마치 안전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즉,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해온 국가정책과 맞물려 자율안전이라는 미명

<sup>†</sup>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yoojh@semyung.ac.kr

아래 안전조직이 파괴된 결과 1997년 이전 수준의 산업재해증가와 OECD 회원국내 산재발생율 1위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 II. 기업경영과 안전의 관계

### 1. 안전목표

안전관리의 기본적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휴머니즘(Humanism), 즉 인도적 신념의 실현이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인간존중의 개념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은 나와 내 가족, 친구이외에는 모두 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나 아닌 남이라는 개념이 무척이나 강한 집단이다. 따라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무관심하게 된다. 그러나 내 자식, 내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작업장이든 가정이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가는 인간존중이야말로 안전의 기본적이 개념이 되는 것이다. 어느 작업장이나 가정 내에서 보면 반드시 그 환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같은 작업을 하는 직장 내에서도 조별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각 조장의 지도력에 따라 조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가 속한 집단에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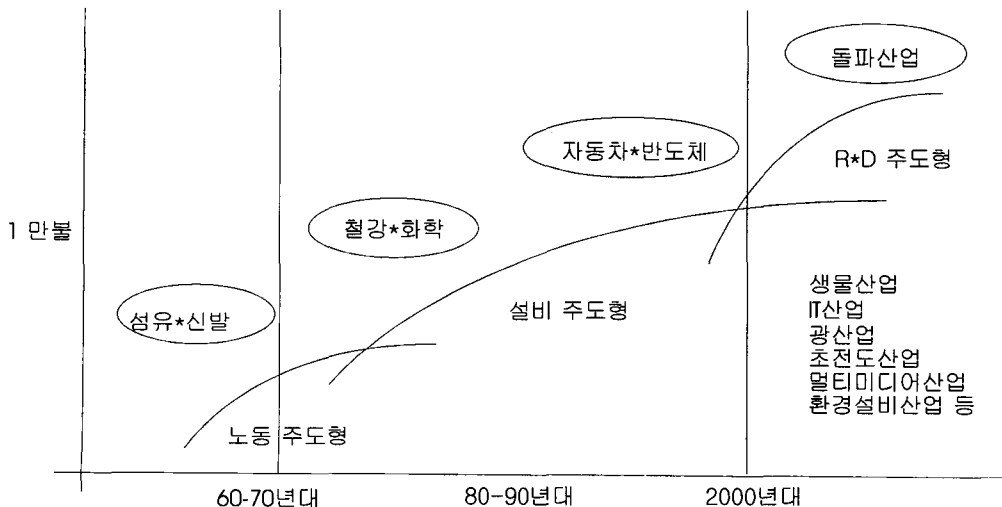
기업은 경영에 이익을 가져오도록 생산이나 관리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립을 계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설비의 파손이나 작업자의 사상이 발생되면 생산이나 작업 능률이 현격하게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며 기업이 주는 신뢰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은 경영관 이상의 문제이며 설비 및 작업 방법을 안전화 하는 것은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생산의 능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된다. 직장의 재해 방지 때문에 작업상의 무리 폐단, 헛됨을 없애는 것은 안전 관리 활동의 큰 과제이지만 그것은 또 경영관리의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제창되었던 「안전제1, 품질 제2, 생산 제3」의 슬로건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 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2000년대 밀레니엄 시대에는 「안전제1, 안전제2, 안전제3」이라는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할 때이다.

현대인은 지금 물질의 풍족보다도 마음의 풍족을, 경제적인 부보다도 생활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안전이 지향하는 방향과 바로 일치한다. 안전을 추구

1인당 GNP



하는 사회의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그 사회적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 관리 활동을 더욱더 강력하게 조직하고 전개시키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 2. 기업경영과 안전의 역할

안전은 생산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건의 하나이며, 또한 인간과 설비 모두가 안전이 확보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므로, 안전과 생산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업에서 생산이 원활하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면 현장에 잠재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생산라인에 있는 설비(건축물 포함)의 문제점과 생산자(사람)의 불안정한 행동 유발 등이 생산 현장에서 제거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그림은 안전과 생산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안전과 생산성의 관계

### 3. 경영과 안전의 상관관계

기업의 발전은 인간 능력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룩되기 때문에 경영은 안전을 우선으로 할 때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그림에서 제시한 바대로 경영과 안전의 각 3요소가 일체화가 될 때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이익의 극대화와 진정한 노사관계가 정립된다.

### III. 한국 경제 현황

#### 1. 실물 경제 지표

총량적인 실물경제지표는 실업률을 제외하고는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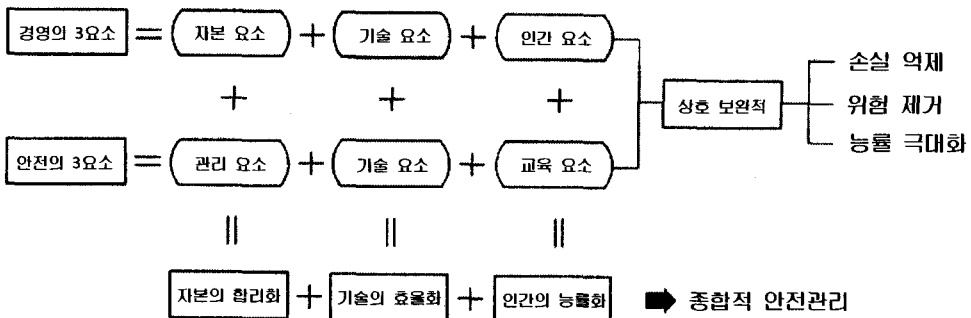
특히, 생산현장의 회복세를 나타내는 제조업가동률, 산업용 전력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민간소비도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

- 제조업가동률(%) : (98) 68.0 → (99) 76.5 → (00.1) 80.6

- 산업용 전력소비량(97=100) : (98) 93.1 → (99) 103.0

	IMF이전 (97.9)	IMF이후 최저	99.12월
경제성장률(%)	5.5(97.3/4)	△7.2 (98.2/4)	10(99년)
산업생산(지수)	100.0	97.5(98.8)	126.4(2000.1)
설비투자(지수)	100.0	56.8(98.8)	97.2
민간소비(지수)	100.0	88.0(98.8)	121.1
외환보유고(억불)	224	39(97.12)	811(2000.3)
환율(w/\$)	898	2,000(98초)	1131(2000.2)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 System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으며 기업규제완화 조치 이전의 안전조직 System으로의 복귀는 전무한 실정임.



경영과 안전의 종합적 상관관계

2. 예산현황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의 현황

부 처	'98 예산 (구성비, %)	'99 예산 (구성비, %)
교육부	4,231 (14.4)	4,835 (15.0)
과학기술부	5,873 (20.0)	6,545 (20.3)
농림부	506 (1.7)	488 (1.5)
산업자원부	4,211 (14.4)	4,303 (13.4)
정보통신부	200 (0.7)	152 (0.5)
보건복지부	542 (1.8)	549 (1.7)
환경부	399 (1.4)	423 (1.3)
건설교통부	267 (0.9)	274 (0.9)
해양수산부	614 (2.1)	591 (1.8)
농촌진흥청	1,742 (5.9)	1,695 (5.3)
산림청	271 (0.9)	259 (0.8)
중소기업청	423 (1.4)	580 (1.8)
국무총리실	4,976 (17.0)	4,055 (12.6)
기타	5,087 (17.3)	7,445 (23.1)
합계	29,342(100.0)	32,194(100.0)

자료원 : 기획예산처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및 연구개발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IV.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최근 사업장에서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 산업안전 공단 통계에 의하면 IMF 관리체제 이전인 97년의 재해율과 2000년 3월의 재해율을 비교하면 광업의 경우에는 '97년 1.14%

에서 2000년 3월은 1.30% ,제조업은 0.18%에서 0.31%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재해율이 증가한다고 하면 금년 말쯤에는 IMF 이전인 '97년도 재해율 보다 훨씬 높아져 다시 산재왕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여년간 정부, 기업 모두가 합심하여 이룩한 안전관리체제가 무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산업재해는 사업장에 인적·물적인 직접·간접적인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으로 상품의 가치하락, 주가하락, 판매감소 등 회사경영에 크게 영향을 주게된다. 국가적으로는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받아 국가 경영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확대 해석하면 산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함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산재의 증가는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대책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함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산재의 증가는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산재는 막아야 하고 예방되어야 하겠다.

1. 최근 산재증가요인

최근 산재증가요인의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산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비교

구분	특정연구개발사업	기초과학연구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에너지절약기술 및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학술연구진흥사업
사업목표	전략성 공공성을 가진 국가차원의 연구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첨단원천기술 및 핵심산업기술의 중점개발	과학기술연구능력의 배양과 교육진흥 국제교류 증진 과학기술창달	산업계의 기술자립도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	에너지기술의 실용화 추진 및 근원비요인 해결기반 구축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통신실현도모	농림수산물 생산량의 증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건설교통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획평가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획평가	대학의 연구성과 학문발달의 균형발전도모
착수시기	82년	83년	87년	88년	89년	94년	94년	95년	83년
주무부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연구비(98년기준)	3,302억원	1,161억원	2,531억원	131억원	3,020억원	355억원	51억원	505억원	911억원
관리기관	과학기술평가원(KISTEP)	한국과학재단(KOEEF)	한국과학기술평가원(ITEP)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센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건설기술관리센터)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학술진흥재단

업현장에서 산재발생 가능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할 안전관리체제는 오히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체제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스텝으로 하여 구성원이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안전관리조직을 전제로 하고 있다. IMF 관리이후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부서가 지원 부서라고 하여 과감한 정리 및 정비를 단행한 기업이 많다. 그리하여 전담안전관리자를 두었던 사업장이 안전관리자의 수를 줄이거나 폐직, 또는 겸직 안전관리자를 두어 안전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 안전관리자의 할 일은 단순하지가 않다.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설비나 장치, 또는 운전이나 정비작업 등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어 이를 인지하고 이런 위험으로 인하여 무엇이 잘못되어 사고로 전이되며, 사고로 전이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사고결과 손상의 크기를 예측하여 이 위험에 대해 적절한 기술적, 설비적, 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축소하는 대책 즉, 인명구조, 응급조치, 대피, 응급복구 등 비상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업무들은 생산현장의 공정기술, 설비기술, 인간의 행동특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설계, 설치, 운전, 정비시 고려해야 할 본질안전요소와 이들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문안전관리자는 알아야 하고 챙겨야 할 것들이 아주 많다. 따라서 안전 관리업무는 같은 직장, 같은 부서에서 오랫동안 현장기술 및 그 관련 안전 기술에 관한 경험을 축적한 사람이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IMF이후 현장에서는 '98년 말 현재 기업에서 근로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수는 96년말에 비해 34%가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법정업무 고용 대상업체의 수가 14%정도 감소하였고 기업규제완화로 의무고용대상 업체를 50인 이상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기업에서는 안전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안전관리체제도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일은 사람이 한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고 아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그 사람의 관심여하에 따라 업무추진의 중심과 방향이 달라진다. 생

산위주로 오로지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을 걸직 시켰다고 하면 이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불요불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생산을 극대화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기 쉽다. 일은 조직이 해낸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잘 짜여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그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다.

지금 사업장에는 다시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외국연수생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미숙련 작업자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일용직인 경우 일의 미숙함은 물론 위험이 어느 곳에 존재하고 어떤 인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단순한 업무지식이나 기능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과 관계없는 아주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도 많다.

산재 증가요인 중 2번째 중요한 요인으로는 정부의 제도적 대책미흡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안전 관리는 대체적으로 관 주도 형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보다는 법에서 정한 규제를 따르는 수준인 수동적인 입장을 견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연히 법에서 정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어느 회사나 유사한 안전관리조직, 유사한 설비, 유사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자율안전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이 스스로 독창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존립하기 어려운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규제가 아주 강한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사후규제는 벌금 몇백만원 정도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풍조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현행 법규만 잘 피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진 것 같다.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의 안전관리만을 수행하고 있고, 사후규제나 안전중시 풍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완화, 의무교육 폐지 또는 축소 등 안전관련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정부의 감독이나 사후규제도 소극적으로 실시하게 되니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은 제기능을 찾지 못하고

이름뿐인 안전관리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갑작스런 규제완화로 인하여 안전관리체계가 흔들리므로 인하여 적절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할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안전관리 활성화의 길**

산재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은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길이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정부의 제도적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① 정부차원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실시하는 방법
- ② 적절한 규제와 자율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
- ③ 완전자율 안전관리 방법

그러나 지금까지 관 주도형 안전관리제도를 갑자기 완전자율과 비슷한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는 준비가 부족한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 모두가 안전지식, 안전기능, 안전태도가 갖추어져 있고, 사회의 구조가 인명과 안전을 중요시하여 무슨 일을 하거나 안전하게 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응분의 손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후규제의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아직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경영자의 의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재해율이 크게 변하고 정부의 감독이 강화되면 재해율이 크게 감소하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자율 일변도의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제도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러한 때 안전관리 선임의무를 완화하고, 의무안전교육의 완화, 유해위험기구 등의 검사나 심사의 축소 등 안전관리 완화시책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안전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규제와 자율의 비율 조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또는 자율규제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경기 활성화로 인한 근로시간 및 작업강도 증가, 미숙련공이나 일용직 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증가, 복잡한 도로교통이나 주변환경의 악화 등 산재 취약점이 아주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강화,
- 안전보건 의무교육 복원,
- 위험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등의 제도 강화,
- 안전투자증대,
- 안전전문인의 역할 증대,
- 산·학·관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강화**

안전관리조직을 우리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확충하고 이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관리조직의 능률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97년 이전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의무교육 복원**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 및 태도를 형성하게 하는 데는 안전교육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을 사용하는 생산현장에서 조차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연수생들은 자기업무에 대한 숙련도나 위험도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게조차 적절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이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율안전의 지름길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이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자율안전관리가 가능할 때까지는 모든 사원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의무를 부여하여 스스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설비 검사제도 확대**

위험설비의 안전성 확보는 위험설비의 설계시부터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 운전, 정비할 때에도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체검사, 정기검사 등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안전

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 관한 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하겠다.

#### ④ 안전투자확대

IMF 이후 각 기업에서는 안정에 대한 투자가 몹시 인색해 졌다. 하기가 기업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안전투자에 여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공장 가동률이 최상의 상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그 활동이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급해도 자동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점검하고 이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가능한 안전투자는 과감히 실시되어야 하겠다.

#### ⑤ 안전전문인 역할증대

안전전문인의 활용이 전문기술 안전관리를 펼칠 수 있다. 안전분야에 전문인력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이들이 전력을 다하여 일 할 수 있는 비전있는 일감이 있어야 한다. 평범한 관리수준이 아니라 전문안전기술인 수준의 전문영역이 확보되어야 한

다. 위험성 평가, 사고결과 영향평가, 위험설비 안전설계기준, 위험기계 안전운전이나 안전성 확보 등은 전문 안전기술인이 필히 참여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 3. 맺는말

기업규제완화나 사업장 구조조정 등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안전관리체제와 안전문화수준이 너무 빨리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다. 또한 경제의 회생 및 생산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산재의 잠재위험이 증대되어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재해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 ① 안전관리체제 강화
- ② 안전교육 의무화 확대
- ③ 위험설비 검사제도 등 강화
- ④ 안전투자확대
- ⑤ 안전전문기술인의 역할증대 등 제도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야 하겠다.